

아이티 지진은 재건의 기회가 될 수 있을까?

강 정 원

2010년 1월 12일 강도 7의 지진이 아이티를 폐허로 만들고 이제 2년 6개월의 시간이 지났다. 지진 발생지에 근접해 있던 수도 포르토프랭스는 가장 극심한 피해를 입었고, 23만 명의 사망자와 30만 명의 부상자 그리고 170만 여 명의 철거민이 발생했으며, 재산 피해 역시 80억 달러에서 13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된다. 지난 반세기 인류의 그 어떤 자연 재해보다도 극심한 인명 피해를 가져온 아이티 지진은 서반구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이자 동시에 독재와 쿠데타 그리고 외세에 의한 군사점령으로 얼룩진 현대사를 가진 비극적 국가라는 인식과 결합되며 인도주의적 원조의 당위성을 부각시켰다. 지진 발생 2개월이 지나 클린턴 부부의 주재로 열린 원조국 회의에서 전 세계 55개 국가는 향후 94억 달러의 무상원조를 제공할 것을 약속했으며, 미국 정부는 2004년부터 아이티에 주둔해오던 유엔 아이티 안정화 임무단(MINUSTAH), 유엔 인도주의 업무조정국(OCHA) 등과 협조해 약 2만 명에 이르는 병력과 구호인력을 파견했다. 개인이나 NGO 등이 주도하는 사적 원조 역시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는데, 2010년 유엔의 자료에 의하면 당시 집행된 35억 달러의 원조 자금 가운데 약 14억 달러가 사적 원조인 것으로 분류되며, 미국의 경우 2가구당 1가구가 아이티에 기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진 발생 이후 아이티에서 들려오는 외신 보도는 국제사회가 주도하는 아이티 재건 사업이 상상치 않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이 짙다. 일례로 지난 2011년 10월 수도 포르토프랭스에서는 수백 명이 유엔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요구하며 거리로 뛰어 나왔고,



유엔군 철수를 요구하는 아이티 사람들

여성,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유엔군이 수많은 인권남용을 자행했다는 혐의에 급기야 미국군사학교감시단(SOAW) 등의 시민단체의 자체적 조사단이 파견되기도 했다. 갈등은 2010년 10월 콜레라 환자사례가 약 1백 년 만에 처음으로 아이티에서 보고되며 급격히 고조되기 시작했다. 최초로 콜레라 환자가 보고된 후 불과 몇 주 만에 콜레라는 건잡을 수 없이 전국으로 확산되기 시작했고, 1년 만에 약 52만 명의 감염자와 7천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여기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는 아이티 국민의 80% 이상이 콜레라 감염경로로 유엔군을 지목하고 있다는 점이다. 콜레라 발병은 유엔군으로 대변되는 외국 병력 주둔에 대한 적개감과 의혹을 증폭시켰으며, 시민들이 주도한 수차례의 반대 집회는 유혈 충돌로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서 아이티에 파견된 미주기구(OAS) 대표인 리카르도 사이텐푸스는 “국제원조의 실패 사례를 든다면 다름 아닌 아이티가 될 것

이다”라고 말하며, “아이티는 국제원조기관과 NGO의 메카이자 실험실이 되었고, 심지어 이들이 전문적 수련을 받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할 훈련지가 되었다”라고¹⁾ 비판한다.

아이티 재건 사업에 전례 없는 규모의 국제원조가 투입되고 있음에도 정작 아이티 국민이 국제사회의 개입에 이토록 적대감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이티의 시민 단체를 비롯한 국내외 다양한 단체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건 사업에 이토록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 아이티는 더 나아지고 있지 않은가? 이 글은 아이티에서 지진 발생한 직후부터 현재까지 2년 6개월 동안 아이티에서 진행된 재건 사업의 현황을 살펴보고, 핵심적인 논쟁점을 짚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이티는 이제 위기 수습에서 안정적인 국가 재건으로 나아가야 하는 단계에 있다. 구호 사업의 실패가 반복된다면 그 대가가 이제는 더 혹독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동일한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이 시점에서 무엇이 잘못되어왔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 먼저 아이티 재건 사업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사안을 살펴보자.

원조로 인한 종속성 증대와 신자유주의적 구조 개혁의 심화

아이티에서 군대 파병과 원조를 통한 국제사회의 개입은 사실상 새로운 것이 전혀 없다. 18세기 자메이카와 더불어 전 세계에서 소비되는 설탕의 가장 많은 양을 생산하며 카리브 해의 진주라는 애칭을 얻었던 아이티(당시의 명칭은 생도맹그)는 당시 프랑스 식민지 중 가장 많은 이윤을 창출하던 곳이었다. 흑인 노예가 주체가 된 1804년 아이티혁명은 프랑스

1) Roger Annis, “OAS Diplomat's Words Rattle Haiti's Occupation Regime”, December 28, 2010.
<http://upside-down-world.org/main/haiti-archives-51/2836-oas-diplomats-words-rattles-haitis-occupation-regime>.



아리스티드 전대통령

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의미했으며, 노예무역과 식민주의에 의존하던 영국과 이웃 나라 미국에게도 간과할 수 없는 위협을 의미했다. 인류학자 미셸 롤프 트루요가 말하듯 아이티혁명은 “그 당시에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고, “흑인들이 장기적으로 심각한 위험성을 야기하리라고는 여전히 생각할 수가 없었다.”²⁾ 도무지 생각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저지른 아이티에 대한 프랑스와 미국의 응징은 실로 장기간에 걸쳐 혹독하게 가해졌다. 프랑스는 1억 5천만 프랑(현재 약 210억 달러에 해당)의 독립 배상금을 요구했고, 비록 배상금은 9천만 프랑으로 삭감되었지만 독립 이후 아이티는 반세기 이상에 걸쳐 부족한 자원의 대부분을 배상금 탕감에 쏟아 부어야 했다. 2003년 당시 아이티의 대통령이던 아리스티드(Jean-Bertrand Aristide)가 프랑스에게 독립 배상금 명목으로 부당하게 갈취해 간 210억 달러를 상환할 것을 요구했을 때, 프랑스는 미국을 도와 아리스티드 정부를 전복시키고 국외로 추방시키는 것으로 답했다.

2) 미셸 롤프 트루요, 『과거 침묵시키기: 권력과 역사의 생산』, 김명혜 옮김, 그린비, 2012, 3장에서 인용.

독립 이후 아이티에서 미국의 개입은 보다 전면적이고도 지속적이었다. 20세기 초반 약 20년에 걸친 군사점령 이후에도 미국은 다양한 국제 기구의 차관을 동원해 악명 높은 뒤발리에 부자(父子)의 독재 정권을 후원했다. 일례로 현재 아이티 외채의 40% 가량에 해당하는 미주개발은행(IDB) 차관은 상당부분 뒤발리에 부자 정권에서 집행되었으며, 공적 차관은 뒤발리에 부자의 정치 자금과 비자금으로 대거 전환되었다. 2006년의 한 통계 자료에 의하면 아이티 국민의 절반 이상은 뒤발리에 정권 퇴각 이후에 태어났지만 당시 유입되었던 차관 때문에 태어나서부터 빚더미에서 삶을 시작해야 한다.³⁾ 미국의 군사적·경제적 개입은 1986년 장 클로드 뒤발리에(일명, 베이비 독) 퇴각 이후에도 지속되었고, 오히려 더욱 심화되었다. 뒤발리에 퇴각 이후 미국의 개입은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진행되었는데, 정치적으로는 아리스티드와 그가 설립한 판미 라발라스(Fanmi Lavalas) 정당을 군사력 파병을 통해 견제하고 제재하는 것이었고, 경제적으로는 수출 제조업을 위한 값싼 노동력의 제공자로서 그리고 미국농산물 판매를 위한 시장으로 아이티 경제 구조를 전면 변화시키는 것이었다.

지진 발생 이후뿐만 아니라 지진 발생 이전부터 아이티 사회의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된 사안, 특히 정치 불안과 정부의 무능력, 과도한 도시 집중화와 수도 포르토프랭스의 인구 포화와 슬럼화, 농업 경제의 붕괴, 실업, 저임금 등의 문제 등의 배후로 항상 미국의 역할이 지목되었음을 부인하기는 힘들다. 1991년 군부에 의해 아리스티드 정권이 전복된 이후 미국은 유엔을 통해 평화유지 명목으로 아이티에 지속적으로 군사력을 주둔시켜왔으며, 2004년 아리스티드가 또다시 정권에서 강제로 물러나야 했을 때부터 유엔 아이티 안정화 임무단은 본격적으로 국가 기능을 대

3) Debayani Kar and Tom Ricker, "IDB Debt Cancellation for Haiti", December 18, Foreign Policy in Focus 2006.
<http://upsidedownworld.org/main/haiti-archives-51/550-idb-debt-cancellation-for-haiti>.

체하기 시작했다. 또한 미국국제개발처(USAID)와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IBRD), 미주개발은행(IDB) 등 국제금융기관은 무상원조와 차관을 제공하거나 또는 기존의 차관을 탕감해 주는 조건으로 미국에서 수입하는 쌀과 농산품의 관세를 낮추고, 석유 등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하는 등의 신자유주의 구조 개혁을 요구했다. 그 결과 쌀, 설탕, 고기 등을 자급자족하던 아이티는 현재는 쌀 소비량의 80%를 수입에 의존하게 되었으며, 카리브 해 국가들 가운데 가장 많은 식료품을 미국에서 수입하게 되었다. 최저임금 역시 기존의 하루 1.75달러에서 2009년 10월 수차례의 집회와 충돌을 거쳐 3.75달러로 인상하는 데 성공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역대 최저 수준에 불과하다.

국제 원조 기구와 금융기관의 신자유주의 정책과 더불어 미국, 프랑스, 그리고 2004년 유엔 아이티 안정화 임무단 파병을 통해 합류하기 시작한 캐나다는 군사적, 정치적 개입을 통해 아이티를 그들의 구미에 맞게 변화시키는 데 주력해왔으며, 그 과정에서 국제원조는 이들이 원하는 것을 끌어내기 위해 활용된 주된 수단이었다. 아이티 지진 발생 이후의 상황은 달라졌을까? 아이티의 국제원조는 강대국의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대변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재난 극복과 재건을 위한 국제연대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거듭나는 데 얼마나 성공했을까?

이와 관련해서 ‘아이티 회복을 위한 임시위원회’(IHRC)의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빌 클린턴의 고백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10년 3월 미국 상원 위원회에서 클린턴은 1990년대 그가 추진했던 아이티 무역 자유화 정책이 “아칸소 주의 농민에게는 약간의 이득이 되었을지라도 실패로 끝났다”고 자인하며, “그것은 실수였다. 다른 누구도 아닌 내가 한 일 때문에 아이티는 자국민이 섭취할 쌀 생산 능력을 잃게 되었고, 나는 매일매일 이러한 실수의 결과를 책임지며 살아야 했다”⁴⁾고 고백했다. 아이티의 전

4) Alex Dupuy, “Disaster Capitalism to the Rescu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Haiti After the Earthquake”, NACLA Report on the Americas, July/August, 43(4), 2010, pp. 14-19.

총리이자 아이티 회복을 위한 임시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인 장막스 벨리브 역시 이례적인 고백을 하는데, 그는 아이티 회복을 위한 임시위원회의 종속성을 비판하는 아이티 상원 위원들에게 “여러분이 여기에서(아이티 회복을 위한 임시위원회 문건) 종속성을 감지하기를 바랍니다. 만일 그렇지 못한다면 찢어버리는 편이 낫습니다. 나는 지난 18개월 간 우리가 자율적으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낙관해 왔습니다. 하지만 총리로서 이제 나는 우리가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라고 고백한다.⁵⁾

클린턴과 벨리브의 고백은 원조의 제공자나 의사결정권을 가진 최고 위 정치인들이 아이티 원조의 문제점을 성찰적이고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로도 읽힐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의 자아비판이 실제 원조 집행 단계에서도 반영되고 있는지는 회의적이다. 단적이 사례로 2010년 미국의회를 통과한 아이티 경제 부흥 프로그램(HELP) 법령은 아이티에서 수입되는 편물과 직물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고 2억 평방미터(SME)로 생산 할당량을 증가시키는 것을 요지로 한다. 즉 아이티를 미국의 수출 제조업을 위한 생산기지로 전환시키려는 기존의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심사이다. 반면 아이티의 농업을 위한 장기적 대책은 원조국이나 아이티 정부 양측 모두 찾아보기 힘들다. 아이티 정부가 발표한 원조 필요성 평가보고서에서 아이티 정부가 요구한 120억 달러의 예산 가운데 단지 0.3%만이 농수산업 분야에 할당되었다는 보도는 그 단적인 사례이다.⁶⁾

아이티 지진과 국제 원조가 미국의 기업들에게는 호기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지진 발생 이후 1년 동안 미국 정부는 총 2억 달러 정도의 원조사업 하청을 주었는데, 이 가운데 2%만이 아이티의 기업에게 할당되었고 나머지는 모두 미국 기업 차지였다고 한다.⁷⁾ 또한 유엔 특수파견대(UN Special Envoy)가 집행한 24억 달러의

5) Ibid.

6) Kim Ives, “Haiti Reconstruction: Factories, not Fields”, NACLA Report on the Americas, May/June, 2010, 43(3), pp. 4-5.

무상원조 자금 가운데 대부분은 공여국의 병력과 구호인력 유지를 위해 또는 유엔 소속 기관이나 국제 비정부기구의 프로젝트로 할당되었고 1%만 아이티 정부로 할당되었다는 보도도 있다.⁸⁾ 이와 관련해 『충격 독트린』의 저자 나오미 클라인은 “재해 자본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이처럼 “재난 발생 이후 공적 영역을 향해 조율된 공급들과 결합되어 재난을 흥분되는 시장의 기회로 삼으려는 시도들”을⁹⁾ 비판한다. 아이티 지진 이후 유입된 국제 원조는 아이티의 빈곤과 극심한 빈부격차의 주범으로 지목되던 정치적 종속과 신자유주의 구조 조정을 심화시키는 수단으로 전락할 것인가? 원조가 재해 자본주의의 자양분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이어지는 논의가 이들 질문에 대한 약간의 실마리를 제공하리라 기대해 본다.

배제적 개입과 민주주의의 문제

지진 발생 이후 아이티에서 추진되어 온 국제원조사업이 비판을 받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재건 사업과 그로 인한 일련의 변화에서 아이티 국민들이 배제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원조 기관 특히 국제 비정부기구들의 역할과 비중이 증가하고 이들 단체가 정부의 역할을 대체함에 따라 가뜰

7) Deepa Panchang, Beverly Bell, and Tory Field, “The Super Bowl of Disasters: Profiting from Crisis in Post-Earthquake Haiti”, February 16, 2012.

<http://www.otherworldsarepossible.org/another-haiti-possible/super-bowl-disasters-profiting-crisis-post-earthquake-haiti>.

8) Office of the Special Envoy for Haiti, “Has Aid Changed? Channelling Assistance to Haiti before and after the Earthquake”, June 2011, http://www.haitispecialenvoy.org/download/Report_Center/has_aid_change_d_en.pdf.

9) Kanya D'Almeida, “Martelly-Clinton Seal Deal for Next Wave of Disaster Capitalism in Haiti”, April 24, June 2011, <http://upsidedownworld.org/main/haiti-archives-51/3010-martelly-clinton-seal-deal-for-next-wave-of-disaster-capitalism-in-haiti>.



선거가 끝나고 지지자들이 아리스티드 전대통령의 복귀를 외치고 있다.

이나 허약했던 정부 기능이 더욱 취약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진 이후 아이티 재건 과정에서 국민이 배제되고 있다는 비판은 2010년 11월의 선거에서 더욱 증폭되었다.

2010년 11월 선거는 지진 이후 무기한 연기되었던 총선과 대선이 함께 치러진다는 점에서, 아이티 역사상 3번째의 민주적 절차에 따른 선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지진에 설상가상으로 콜레라가 발병하며 더 이상 악화될 수도 없을 지경으로 초토화된 아이티를 추스르는 과업을 수행할 정부를 선발한다는 점에서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선거였다. 하지만 지진으로 인해 수십 만 명이 주소지도 없이 여전히 떠돌이 신세로 전락하고, 그럴 듯한 투표소나 투표인 명부조차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는 수많은 불안 요소를 내장하고 있었다. 불만은 임시선거중앙위(CEB)가 라발라스 당을 비롯해 십여 개 정당의 출마권을 박탈하면서 극에 달하게 됐다. 1996년 아리스티드 전 대통령이 설립한 라발라스 당은 한때 70%에 육박하는 압도적인 지지율을 획득하며 확고한 대중적 기반을

획득한 바 있다. 2004년 쿠데타로 라발라스 지지자나 활동가는 투옥과 암살의 대상이 되었고, 이후에도 제도권 밖에서 머물러야 했지만 다수의 아이티 국민에게 아리스티드와 더불어 라발라스 당은 미국 주도의 신자유주의 구조 조정 정책이나 식민주의적 외세의 점령 그리고 뒤발리에 정권으로 대변되는 전통적 엘리트 계층과는 대척되는 가치와 변화를 상징해왔다. 라발라스 당을 비롯해 십여 개의 정당이 제외된 채 치러진 선거에서 상당수의 유권자들이 투표권 행사를 거부했으며, 결국 23%라는 전례 없이 낮은 투표율 속에 선거는 진행되었다. 논란은 이어진 대통령 결선까지 지속되었으며, 미셸 마르텔리는 17%라는 초라한 득표율을 기록하며 최후의 승자가 되었다. 선거감시단으로 활동했던 미주기구와 카리브 공동체(CARICOM)는 투표과정의 논란과는 무관하게 아이티의 선거를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의미 있는 성과라고 평가했다.

선거 과정에서 빚어진 배제는 지진 이후 아이티 재건 사업 전반에서도 발견된다. 지진 발생 이후 소집된 수차례의 원조기관 포럼에서 정작 아이티 대표를 위한 자리는 없었으며, 아이티 정부를 대행해 원조기금 관리와 재건 사업을 책임질 아이티 회복을 위한 임시위원회의 회원 자격은 약속한 원조액 규모나 탕감을 약속한 차관 규모에 따라 결정되었다. 비록 아이티는 공동의장을 맡은 벨리브 전 총리와 당시 대통령 프레발의 거부권을 통해 일정 비중을 차지할 수 있었지만, 아이티의 재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시민 단체나 기관이 참여할 가능성은 전혀 없었다. 국제 원조 기관과 아이티 원조 기관 간의 소통의 부재도 한 몫을 하고 있다. 여기에는 국제 원조 기관과 아이티 지방 단체들 간의 자금력의 차이도 원인으로 작용하지만, 크레올어를 구사할 수 있는 외국인 실무자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도 간과할 수 없는 요인이다. 이와 관련해 아이티에서 활동하고 있는 브라질 인류학자 리베이루 토마즈는 국제 원조 기관이 아이티 구호 단체와 협력하기보다는 경쟁구도를 형성하려고 한다고 비판한다. 또한 원조 기관이 빈곤 극복보다는 위태로운 상황과 빈곤이라는 상태

를 재생산하고 있다고 비판한다.¹⁰⁾

국제 원조 기관이 주도하는 재건 사업에서 아이티의 시민 단체와 시민이 배제되고 있지만, 아이티 민중은 전통적인 공동체와 연대의 문화에 의존해 자체적인 재건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자생적인 재생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지진 발생 이후 약탈과 범죄가 난무하는 무법천지로 아이티를 묘사하던 외신과는 달리 아이티 민중은 신속히 연대를 통해 위기에 대처했다. 약탈자들은 공동체 규율에 따라 엄중히 처벌되었고, 가족과 친구를 잃은 이들은 비통함 속에서도 폐허에 묻힌 생존자 구조에 몰두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무심하거나 또는 무능력한 정부를 대신해 자체적인 경비대를 조직했으며, 여성과 아이가 폭력에 노출되지 않도록 그리고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아이가 방치되지 않도록 협력했다. 아이티 민중의 자생적인 연대의 노력은 재건을 위한 보다 지속적이고 제도적인 단체의 설립으로 이어졌다. 지진으로 발생한 역내 피난민(Internally Displace People)에게 숙식을 제공하기 위한 농민 단체가 결성되었고, 역내 피난민의 인권과 주거권 확보를 위한 단체도 조직되었다. 또 살아남은 아이들이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자체적인 자금을 조달해 교사를 모집하고 교실을 정비하는 단체도 생겨났으며, 난민 캠프의 여성과 아이들을 성폭력과 인권유린에서 보호하기 위한 단체가 결성되었다. 이들 단체의 활동은 아이티 재건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왔지만, 문제는 이들이 보유한 제한된 자원만으로는 상황을 호전시키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데 있다. 아이티의 재건을 위한 아이티 민중의 자생적인 노력들이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국제 원조 자금의 집행 단계에 이들이 결정권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할 것이다.

10) Raúl Zibechi, "Haiti According to Haiti: International Aid as Colonialism", May 18, 2010.
<http://upside-down-world.org/main/haiti-archives-51/2498--haiti-according-to-haiti-international-aid-as-colonialism->

사회적 약자와 피난민의 인권

아이티 재건 사업에서 현재 가장 논쟁이 되고 있는 사안은 피난민의 주거지 확보 문제와 피난민을 비롯해 여성과 아동과 같은 사회적 약자의 인권 유린 문제이다. 아이티 지진으로 인해 피난 상태에 내몰린 인구는 현재 약 170만 명으로 추산된다. 피난민 가운데 상당수는 20세기 후반 농촌경제 붕괴로 인해 수도 포르토프랭스로 이주해온 도시 빈민이다. 이들 대부분은 지진으로 생계의 터전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친척을 잃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현재 아이티에는 총 1300여 개소의 피난민 임시 캠프가 세워져 있고, 이 중 860개가 수도 포르토프랭스에 배치되어 있다. 이들 임시 캠프는 약 40만 가구를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된다. 피난민에게 선택의 폭은 많지 않아 보인다. 고향 마을로 돌아가는 것이 대안으로 권고되기는 하지만,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인적·물적 네트워크를 확보하고 있는 이들도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당장 생계를 유지할 수단이 막막하기 마련이다. 폐허가 된 도시에서 새로운 주거지를 자력으로 확보하는 것 역시 현실성이 거의 없다. 임시 캠프가 유일한 생계 대책인 피난민에게는 공권력 또는 임시캠프 주둔지 소유주에 의한 강제 철거라는 즉각적인 위협 이외에도 기아, 폭력, 성폭행, 질병 등의 무수한 위협이 도사리고 있다.

올해 출판된 『구조 이행: 지진 발생 이후의 아이티』라는 책의 공저자로 참여한 마크 쉐러는 임시 캠프에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아이티 피난민의 증언을 토대로 임시 캠프의 삶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쉐러에 따르면 캠프에서의 삶은 2차적인 정신적 외상을 입는 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두 번째 지진”을 겪는 것으로 표현되곤 한다.¹¹⁾ 텐트는 불과 20센티

11) Mark Schuller, “‘They Forgot about Us!’: Gender and Haiti’s IDP Camps, Interview and Translation”, *Meridians*, 11(1), 2011, pp. 149-157.



아이티 난민 캠프의 모습

간격으로 비좁게 설치되어 있으며, 임시 캠프의 절반가량이 어떤 상하수도 시설도 보유하고 있지 않다. 피난민은 플라스틱 병에 물을 담아 또는 공개된 장소에서 몸을 씻는다. 비좁은 주거 공간, 사적 공간의 부재, 상하수도 시설뿐만 아니라 전력 시설 등의 부재는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최소한의 조건을 박탈할 뿐만 아니라 전염병 확산과 성폭력 등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식량 배급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유린의 사례도 빈번하다. 식권 배급 소식에 만나질 아니 꼬박 하루를 잠도 자지 못하고 줄지어 기다리는 것은 다반사이고, 식권 분배자는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¹²⁾.

피난민의 상황은 현재 아이티가 직면하고 있는 두 가지 절박한 과제를 제기한다. 하나는 인간 존엄성을 존중하는 인간적인 얼굴을 한 원조에

12) Mark Schuller, "Shattered and Scattered: Haiti's Quake Through the Lens of Human Rights", NACLA Report on the Americas, July/August, 43(4), 2010, pp. 20-27.

의 요구이다. 지진으로 삶의 터전과 가족들을 잃은 이들에게 주거, 식량, 교육과 같은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여성과 아동 등 기존의 사회적 약자와 재난 이후 등장한 피난민이라는 새로운 사회 집단이 아이티 재건 과정에서 가장 취약한 상황에 노출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고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보다 장기적인 과제는 지방 분권화이다. 지진 발생 이전부터 수도 포르토프랭스는 아이티 인구의 3분의 1이 밀집된 포화 상태였다. 포르토프랭스의 하부시설과 생태조건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구가 20만에서 30만 사이라는 연구 결과를 고려하면, 수용 범위를 10배 이상 초과했다는 의미이다. 아이티 지진을 천재(天災)라기보다는 인재(人災)로 해석해야 할 근거이기도 하다. 피난민의 장기적인 주거지 확보는 지방분권화라는 장기적이고도 포괄적인 틀 안에서 진행되어야만 또 다른 참사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아이티의 지진은 아이티 사회의 굴곡과 식민주의의 기나긴 역사가 과거형이 아닌 현재진행형으로 되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뼈아픈 경험이다. 하지만 지진의 참혹함만큼 재난에 대응하는 아이티 국민들은 강한 생존력과 연대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지진 이후 재건 사업은 아이티에게 생존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을 요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민중이 배제된 정치구조, 자급자족 능력을 박탈하는 신자유주의 개혁, 농촌과 도시의 불균형, 비정부기구에 의한 국가 경영으로 특징지어지는 기존의 발전 모델이 수정되지 않는다면 재건 사업이 성공을 거두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아이티 국민이 변화를 요구하고 변화를 주도할 의지를 보이고 있다면, 국제사회는 어떠한가? 국제사회는 변화할 의지가 있는가? 국제사회는 아이티와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제는 우리가 대답해야 할 차례이다.

강정원 — 서울대학교 라틴아메리카연구소 HK연구교수